

# 20대 총선 153개 정당정책 비교평가

2016.4.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20대 총선 153개 정당정책 비교평가

### <목차>

1. 각 정당정책 비교평가의 의미
2. 정책질의 내용
3. 각 정당 간 정책친화도
4. 정책질의 답변결과 분석
  - 1) 경제 분야
  - 2) 정치 분야
  - 3) 사법 분야
  - 4) 통일/평화 분야
  - 5) 사회복지/교육 분야
  - 6)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 7) 소비자/기타 분야
5. 각 정당 정책질의 답변서<별첨>

## 1. 정책 비교 평가의 의미

20대 총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선거구 획정과 공천 파동 등으로 어느 때보다 정치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정책이 실종된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투표율 저조, 정치 불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우리의 선거 문화와 정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판단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거나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153개 정책을 선별했다. 이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4개 주요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 정당들의 답변을 받았다. 경실련은 이 답변을 분석해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이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분석은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입장과 그 차이만을 유권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아울러 평가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경실련의 입장이 반영된 평가는 하지 않았다.

또한 153개 정책질의 답변을 바탕으로 유권자의 정당선택을 돕기 위하여 유권자의 관심이 크고, 정당 간 입장차가 큰 20개 질의를 선별해 ‘정당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 프로그램의 질의로 활용했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유권자들이 20개의 정책 현안 질의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선택하면 정당들의 답변과 비교해 최종적으로 어느 정당과 정책 성향 일치도가 높은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 2. 정책질의 내용(총 153개)

- 대 상 : 19대 국회 원내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정책질의 : 최근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크거나 정당 간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책,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정책들을 질의함

<경제분야> 대기업(재벌), 노동정책 등 48개 문항

<정치분야> 정치, 정부, 지방자치 정책 등 23개 문항

<사법분야> 국정원, 검찰, 법원 관련 정책 등 10개 문항

<통일분야> 통일, 외교, 안보 등 12개 문항

<사회복지/교육분야> 복지, 교육, 의료 등 24개 문항

<부동산/주택분야> 부동산, 공공건설 등 25개 문항

<소비타 등 기타분야> 공공요금, 개인정보, 사회 현안 등 11개 문항

### 3. 각 정당간 정책 일치도

< 각 정당의 153개 정책 일치도 >

전체(153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새누리당		40개(26.1%)	45개(29.4%)	25개(16.3%)
더불어민주당	40개(26.1%)		91개(59.5%)	107개(69.9%)
국민의당	45개(29.4%)	91개(59.5%)		88개(57.5%)
정의당	25개(16.3%)	107개(69.9%)	88개(57.5%)	

- 153개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이 정당 상호간에 어느 정도 일치되는지를 조사해 보면 정당 상호간 정책 친화도 뿐만 아니라, 정책적 노선의 경향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 비교 결과 정책일치도가 가장 높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으로 153개 정책중 107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일치해 69.9%의 일치도를 보였다. 이 두 당이 다른 2개 정당에 비해 정책적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친화도를 보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91개(59.5%) 정책에 일치도를 보였다.
- 정책일치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새누리당과 정의당으로 153개 중 단 25개 정책만이 일치했다. 두 당의 정책일치도는 16.3%로 두 당 간에는 정책적 차이가 가장 커 정책적으로 가장 친화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40개(26.1%)의 일치도를 보였다.

## 1. 경제분야

### 1) 총괄평가

< 경제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

경제분야 (총 48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새누리당		9개(18.8%)	10개(20.8%)	3개(6.3%)
더불어민주당	9개(18.8%)		26개(54.2%)	30개(62.5%)
국민의당	10개(20.8%)	26개(54.2%)		30개(62.5%)
정의당	3개(6.3%)	30개(62.5%)	30개(62.5%)	

- 경제분야 정책일치도가 가장 높은 정당 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과 정의당 조합으로 총 48개 문항 답변 중 30개(62.5%)가 일치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가장 낮은 정당 조합은 ▲새누리당과 정의당으로 단 3개(6.3%)의 답변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VS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첫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방안 중 ▲지주회사부채비율 및 자회사지분보유 정상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 및 소비자집단소송제도입,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재벌 편법 및 위법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중소기업적합업종 대상 확대 ▲상권영향평가서 독립적 전문기관 작성에 있어 비슷한 정책성향을 보이며, 새누리당과 두드러진 입장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조세형평성 제고 방안 중 ▲법인세 인상,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대상 축소에 있어서도 비슷한 정책성향을 드러내었고, 역시 새누리당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셋째,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중 ▲비정규직 사용제한, ▲파견업종 확대 저지, ▲파견 및 하청노동자 노사협의회 참여보장,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 반대, ▲최저임금 인상을 하한선 법제화, ▲노조활동 손해배상제도 철폐,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정부 저성과자 해고제 철회,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 반대 정책에 있어서 다 같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반대 또는 기타 의견을 제시한 새누리당과 입장차이가 분명하였다.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내 면세점사업 선정방식을 경매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질

의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기탁답변을 내었고, 정의당 만 찬성하여 3당과 차이를 보였다.

- 신규 외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 새누리당과 국민의 당은 각각 기탁와 반대 입장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었다.

## ② 네 정당 일치

- 원산지표시제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4개 정당이 다 같이 찬성을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소비자피해액이 큰 기업의 중대 불공정거래 대한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정책도 4개 정당이 모두 찬성 답변을 제출했다.

## 2) 정당별 평가

### ① 새누리당

-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 관련 질문 대다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소유·지배구조 개선방안 인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 지주회사 부채비율과 자회사 지분보유 정상화, 금산분리 강화,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산순위 10대 또는 30대그룹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재벌개혁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편법 승계에 공익법인이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성실공익법인제도 폐지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 보호 측면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의견에 반대를 하고,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통한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을 규제하자는 의견에도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 금융정책 부문 답변 중, 금융감독기구를 전문성·독립성·중립성이 확보되는 공적민간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질의,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위해 완화된 LTV·DTI를 강화하여 대출을 규제하는 질의에도 반대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 새누리당은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의 법인세 인상,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 대상 축소, 금융소득과세를 완전 종합과세로 전환, 소득세 최고 과세 표준 상향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고, 아울러 소비자먹거리 안전을 위해 중요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예외 없이 표시하자는 의견에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한 질문인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 제한, 파견업종 확대 제한, 임금피크제의 무리한 도입 중단, 저성과제 해고제 철회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반대 답변을 제출했다.

## ② 더불어민주당

- 전반적으로 재벌개혁을 위한 소유·지배구조 문제,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중소기업 상권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통해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시내면세점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매출에 따라 일정비율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주파수 할당과 같은 가격경쟁(경매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특허수수료만 일정부분 올리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계열사와 일반계열사를 원천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무응답을 했다.

## ③ 국민의당

- 국민의당은 전반적인 재벌개혁 관련한 문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지만, 신규 순환출자 외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서는 재벌그룹이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하여, 반대를 하였다. 법인세 인상 등 조세형평성 제고,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④ 정의당

- 정의당은 재벌개혁 관련한 문항에 대해서는 다른 3개의 당보다 가장 개선에 대한 찬성의견이 많아 차별성을 보였다.
- 노동시장 구조개혁 개선과 관련한 문항에 대해서는 모두 해야 한다는 강력한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 2. 정치분야

### 1) 총괄 평가

#### < 정치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

정치분야 (총 23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새누리당		13개(56.5%)	13개(56.5%)	7개(30.4%)
더불어민주당	13개(56.5%)		15개(65.2%)	14개(60.9%)
국민의당	13개(56.5%)	15개(65.2%)		9개(39.1%)
정의당	7개(30.4%)	14개(60.9%)	9개(39.1%)	

- 총 23개의 정치분야 정책에서 일치도가 가장 높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총 15개(65.2%)의 일치도를 보였다. 가장 일치도가 낮은 정당은 새누리당과 정의당으로 7개(30.4%)의 일치도를 보였다.

#### ① 기타 의견이나 모호한 응답 다수

- 정치분야 정책 질의에서 대체로 기타 의견이나 모호한 응답이 많았다. 3당 이상 기타 의견을 응답한 질문이 23개 중 8개였다. 4당 모두 기타 의견을 선택한 질문도 2개가 있었다. 4당이 모두 기타 의견으로 답변을 피한 질문은 대통령 임기, 권력구조를 묻는 질문이었다.

#### ② 새누리당 vs 정의당

- 새누리당과 정의당이 가장 답변 일치도가 낮았다. 23개 중 단 7개 답변만이 일치했다. 그나마 그 중 3개 답변은 ‘기타’ 답변으로, 사실상 일치하는 정책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과 정부인사혁신시스템 강화, 연중 상시 국회 운영,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방식 변경 등 4개 정책에 찬성한 것 뿐이다.
- 특히 국회의원 수 증원 문제나 비례대표 의석 확대,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두 반대한 반면, 정의당은 모두 찬성해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었다.

#### ③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총 15개(65.2%)가 일치해 일치도가 가장 높은 정당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기타’ 응답 8개를 제외하면 명확히 일치하는 정책적 입장은 7개였다.
- 일치한 정책은 국회의원 수 증원에는 반대, 그리고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 예결위원회 상임위화,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투명화, 선거법 위반 다음 공천 배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 정부 인사혁신시스템 강화에 모두 찬성한 것이었다.



#### ④ 4개 정당 모두 일치

-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다. 관피아 척결을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등 정부의 인사혁신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도 모두 찬성입장을 답했다.

### 2) 정당별 평가

#### ① 새누리당

- 새누리당은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6개 질문에 답변 곤란 또는 논의된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 대통령제 대신 내각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이 곤란하다며 피했다. 대체로 권력구조와 관련된 문제와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에서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 특히 상향식 공천 법제화,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로 당선 무효화된 사람 공천 배제 등 공천과 관련된 질의에 모두 ‘당의 공천 관련 사항이므로 답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방식과 기준 변경에는 찬성하며, 향후 20대 국회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것과 공무원과 평교사들의 정당 가입 허용 여부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향후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 ②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23개의 정책질의 중 10개의 질의에 ‘기타’ 의견을 답했다. 특히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대통령제 대신 내각제 도입 여부 등 권력구조 질의에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피했다.
- 선거제도 변경 질의에 대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고 비례를 늘려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방식 및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구성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도,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민 정서상 어렵다고 답했다.

#### ③ 국민의당

- 국민의당은 23개 중 총 14개의 질문에 ‘기타’ 답변을 해 정치분야 정책질의에서 다른 정당에 비해 가장 많은 ‘기타’ 답변을 했다. 무엇보다 10개의 질문에는 모두 ‘내부 논의된 바 없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내각제 도입 여부,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방식 변경,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배분,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구조 변경, 공무원과 교수 정당 당원 가입 허용 여부, 법인단체 정치자금 후원 허용 여부, 상향식 공천 법제화,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통합 여부 등 다양한 질문에서 모두 ‘내부 논의된 바 없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정치분야에서 국민의당의 정책을 파악하기 매우 어려웠으며, 다른 정당과의 비교도 다소 어려웠다.
- 다만 선거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찬성했으며, 국회 예결위원회의 상임위화와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투명화, 선거법 위반시 공천 배제 등의 정책질의에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 ④ 정의당

- 정의당은 23개 질의 중 20개의 질의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답해 가장 많은 질의에 확실한 정책적 입장을 보였다. ‘기타’ 입장을 보인 것은 역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내각제 도입 여부 등 권력구조와 관련된 정책 질의에서였다.
- 정의당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에 찬성했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및 기준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 네 정당 중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보여 반대한 다른 정당들과 의견이 나뉘었다. 또 정당 국고보조금을 독일처럼 당비 수입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것, 상향식 공천제 법제화 역시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명확히 했다.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문제 역시 유일하게 허용 반대 입장을 보였다.

### 3. 사법분야

#### 1) 총괄평가

##### < 사법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

사법분야 (총 10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새누리당		2개(20%)	3개(30%)	0개(0%)
더불어민주당	2개(20%)		6개(60%)	8개(80%)
국민의당	3개(30%)	6개(60%)		6개(60%)
정의당	0개(0%)	8개(80%)	6개(60%)	

- 사법분야에서 가장 높은 친화도를 보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다. 10개 문항 중 8개(80%)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치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새누리당과 정의당으로 0%(0개 문항 일치)에 불과하다.

#### 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VS 새누리당

- 새누리당은 다른 세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과 비교해 사법분야와 관련한 많은 정책들에서 입장차가 극명하게 나뉘었다.
- 다른 세 정당 모두 국정원에 대해 국회의 예산감시 통제와 권력 감시를 강화에 찬성 입장을 취한 반면, 새누리당은 모두 반대 입장을 취했다. 그밖에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형로펌 영리취업 금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반대해 세 당과 입장을 달리했다.
- 현재 국민들이 사법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대형로펌 영리취업 금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찬성을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새누리당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특검 설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찬성, 국민의당은 유보, 새누리당은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사법시험 존치에 관련해서는 정의당을 빼고, 사회적 논의 필요를 이유로, 모두 유보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타 의견이 총 7개로 다른 당(더불어민주당 1개, 국민의당 5개, 정의당 1개)에 비해 가장 많았다.

#### ② 네 정당 일치

- 사법 분야에서는 네 정당이 일치한 정책은 없었다.

### 2) 정당별 평가

## ① 새누리당

- 새누리당은 독립적인 기구특검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무부 검사 파견 금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 국정원 통제강화, 노동법원 증설,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영리취업 금지, 사법시험 존치, 경찰 수사권 보장, 법관회의를 통한 법원인사 선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② 더불어민주당

- 사법불신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음. 10개 문항 중 9개 문항에 찬성의견을 밝혔으며, 국정원 통제강화, 법원분야(노동법원 신설, 대법관 수 증대, 대법관 영리취업금지, 독립적인 법관회의를 통한 법원인사), 검찰분야(기구특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무부 검사파견 금지), 경찰 수사권 보장 문항에서 모두 찬성입장을 밝혔다.
- 사법시험 존치 문항에서만 사회적 논의를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 ③ 국민의당

- 5개의 문항에 찬성을, 5개의 문항에 유보 입장을 보였다. 국정원 통제강화, 대법관 수 증대, 대법관 영리취업 금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경찰 수사권 보장 문항에서 모두 찬성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수 증대 문항에서는 대법관 수 뿐만 아니라 판사 수 증대까지 주장하였다.
- 노동법원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판사 수 증대가 우선되어야한다고 밝히며, 유보입장을 보였다. 독립적인 기구 특검 도입, 사법시험 존치, 독립적인 법관회의를 통한 법원 인사 개선, 법무부 검사파견 금지에 현행 사법제도와의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을 이유로 유보입장을 밝혔다.

## ④ 정의당

- 정의당은 10개 문항 중 8개 문항에 찬성을 1개 문항에 유보를, 1개 문항에 반대로 답변했다. 정의당은 현행 권력기관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법원 등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였으며,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예비시험제라는 대안과 함께 입장을 밝혔다.
- 유보입장을 밝힌 법무부 검찰파견 금지에 있어서는 현행과 같이 검사의 인사 및

업무수행 등에 법무부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사의 법무부 직원 임용 제한만으로 검찰의 독립성은 확보되기 어렵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 4. 통일분야

### 1) 총괄평가

< 통일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

통일분야 (12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새누리당		1개(8.3%)	2개(16.7%)	1개(8.3%)
더불어민주당	1개(8.3%)		6개(50%)	12개(100%)
국민의당	2(16.7%)	6개(50%)		6개(50%)
정의당	1개(8.3%)	12개(100%)	6개(50%)	

- 통일외교분야에서 가장 높은 친화도를 보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다. 12개 문항 중 12개(100%) 모두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치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으로 8.3%(1개 문항 일치)에 불과하다.

#### ① 더불어민주당/정의당 VS 국민의당 VS 새누리당

-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압박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현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이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다른 당들의 정책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에 근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개성공단 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차질없는 진행, 인도적지원 확대, 위안부협상 폐기, ODA투명성 확보 등에 있어서는 새누리당과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입장이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 금강산관광 재개, 주변국 균형외교 등에 있어서는 새누리당·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입장이 나뉜다.
- 야3당의 경우,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재개, 북핵 연계없는 남북경협 확대, 주변국 균형외교,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과 국민의당의 입장이

나뉘고 있다.

## ② 네 정당 일치

- 네 정당이 유일하게 같은 입장은 보인 것은 인도적 지원으로 정치군사적 정세와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문항이다.

## 2) 정당별 평가

### ① 새누리당

- 새누리당은 한반도 정세 악화의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5.24 조치 등 모든 남북관계 현안을 북핵문제에 연계시키고 있어, 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어느 하나도 진전될 수 없다.
- 5·24조치 해제 반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 일본군 위안부 협상 폐기와 재협상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 이외 개성공단 재협상, 금강산관광 재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등에 있어 先북핵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주변국 균형외교는 한미동맹 강화에 중점을 뒀야 한다는 입장이고, ODA 정보공개는 수원국과의 외교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 ②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 문제, 북핵문제, 사드 문제 등 전반적으로 새누리당과 각을 세워 접근하고 있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대화를 통해 타개하고,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 개성공단 정상화,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주변국 균형외교, 인도적 지원 확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일본군위안부 협상 폐기 및 재협상, ODA 정보공개 등에 찬성하고 있다.
- 다만 사드 배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어 북핵문제 해결이 없어도 남북경협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③ 국민의당

- 개성공단 재가동,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인도

적지원 확대, ODA 정보 공개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북핵문제 해결 없는 남북경협을 반대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남북경협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새누리당보다 단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 특히 사드 문제는 새누리당의 사드배치 찬성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신중한 검토에 비해 매우 단호하게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 전반적으로 국민의당은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④ 정의당

- 정의당은 현재 꼭 막힌 한반도 정세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한 경제협력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는 등 개혁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정상화,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주변국 균형외교, 인도적 지원 확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일본군위안부 협상 폐기 및 재협상, ODA 정보공개 등에 찬성하고 있다.
- 다만, 정책추진 과정에서 남북당국간 즉각적인 대화와 열린 자세 등 보다 적극적인 관계개선 움직임을 요구하고 있다.

## 5. 사회복지/교육분야

### 1) 총괄평가

< 사회복지/교육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

복지/교육 (총 24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새누리당		8개(33%)	9개(38%)	8개(33%)
더불어민주당	8개(33%)		15개(63%)	21개(88%)
국민의당	9개(38%)	15개(63%)		15개(63%)
정의당	8개(33%)	21개(88%)	15개(63%)	

- 복지, 교육 분야에서 가장 높은 친화도를 보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으로 24개 문항 중 21개(88%)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치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새누리당과 정의당·더불어민주당으로 33%(8개 문항 일치)이다.

### 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VS 새누리당

- 새누리당은 다른 세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과 비교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와 양육수당 인상, 사회복지 예산 2배 확충(OECD 수준) 등 복지와 증세와 연결되는 정책들에서 입장차가 나뉘었다.
- 다른 세 정당 모두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반면,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취했다. 그밖에 0세~2세 양육비 인상, 사회복지 예산 2배(OECD 평균 수준) 인상, 기초연금과 보육료 전액 중앙정부 부담,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전 과정 의료비 전액 국가 부담 등에 대해서도 세 당과 입장을 달리했다.

### ② 네 정당 일치

- 기여입학제 도입, 보육료 상한선 폐지, 민간보험활성화, 기초생활대상자 축소 및 재원 수급 인상은 4개 정당 모두 반대했고, 사립대 등록금 인하,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은 4개 정당이 모두 찬성했다.

### ③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인 정책

-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인 정책으로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부동산투자를 줄이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보육, 노인장기요양시설)투자를 늘려야 한다.’이다. 새누리당은 반대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기타의견으로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충분한 상황이 아니지만 국민연금의 공익성 확대를 위한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공인프라투자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국민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공공 인프라를 늘리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기금의 장기 안정적 투자수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2) 정당별 평가

### ① 새누리당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예산 논란, 의료사고 분쟁 시 의료진이 무과실 입증을 제외하고 교육과 복지 정책에서 다른 세 정당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증세와 관련된 사회복지 예산 2배 인상(OECD 평균 수준),



0~2세 양육비 인상, 임신에서 출산까지 의료비 국가 전액 부담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신중한 의견을 보였다.

- 학원 운영시간 제한 의무화, 국제중학교 증설, 대입 선발에서 지역균형제 대폭 확대, 대학입시 대학 자율화에서도 신중한 의견을 보이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 ② 더불어민주당

-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학 본고사 도입, 국제중학교 증설, 대학 입시 자율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단, 현재 지자체 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학원 운영시간 제한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 복지정책에서는 0~2세 양육비 인상, 사회복지 예산 2배 인상(OECD 평균 수준), 기초연금·보육료 전액 중앙정부 부담 등 복지를 늘리는 정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투자 확충에도 찬성했다. 포괄간호서비스 모든 공공병원 전면 실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의료사고 분쟁 시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질문에는 19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에서 현행 분쟁조정중재제도 하에서 강제조정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으로 이를 통해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추세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 ③ 국민의당

- 교육 분야에서 대다수의 정책적 입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특수목적을 상실한 특목고·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질문에 입시중심의 특목고는 축소·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나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하는 특목고는 바람직하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국제중학교 역시, 특권층 중심의 국제중은 폐지·축소해야 하지만 예술중, 체육중, 과학중 등 조기교육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적극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복지 분야에서도 정책적 입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투자 확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의료사고 분쟁 시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정책에는 의료사고의 원인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의료진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④ 정의당

- 복지/교육 분야에서 대다수의 정책적 입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하지만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 좀 더 강했다. 암 같은 중증질환은 국가가 무상 진료에 대해 세 정당은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거나 단계적인 보장성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정의당은 미용성형 등의 목적만 제외하고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담당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기초연금을 최저생계비 수준(20만원 → 40만원)으로 높여야 된다는 질문에서는 다른 정당과 같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주장했다.

## 6. 부동산, 국책사업 분야

### 1) 총괄평가

< 부동산·국책사업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

부동산/국책 (총 25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새누리당		3개(12%)	4개(16%)	2개(8%)
더불어민주당	3개(12%)		12개(48%)	23개(92%)
국민의당	4개(16%)	12개(48%)		11개(44%)
정의당	2개(8%)	23개(92%)	11개(44%)	

- 부동산, 국책 분야에서 가장 높은 친화도를 보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다. 25개 문항 중 23개(92%)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치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새누리당과 정의당으로 8%(2개 문항 일치)에 불과하다.

#### 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VS 새누리당

- 새누리당은 다른 세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과 비교해 서민주거안정에 직결되는 많은 정책들에서 입장차가 극명하게 나뉘었다.
- 다른 세 정당 모두 주거보조비 대상자를 현행 4.3%에서 20%까지 확대하고,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찬성 입장을 취한 반면, 새누리당은 모두 반대 입장을 취했다. 그밖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금지,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환수 강화 등에 대해서도 반대해 세 당과 입장을 달리했다.
- 전월세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대책으로 꼽히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찬성했으나 새누리당은 반

대했다. 국민의당은 도입은 필요하지만 시장원리를 무시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타 의견이 총 11개로 다른 당(새누리 9개, 더불어 민주당 1개, 정의당 0개)에 비해 가장 많았다.

## ② 네 정당 일치

-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11.5%)으로 확대하는 것은 4개 정당 모두 찬성했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도 모든 정당이 반대했다.

## 2) 정당별 평가

### ① 새누리당

- 시장의 자율성과 주택거래 감소, 공급 축소 우려를 이유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같은 서민주거 안정 정책 전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시지가 시세 반영, 분양가상한제, 분양권 전매 금지 등 근원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건설 관련한 공정임금제 도입, 직접시공제 전면 시행, 최소운영수입 보장 등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② 더불어민주당

- 전반적으로 임대시장의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이다. 임대시장의 을인 세입자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도입과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전부 찬성했다.
- 기형적인 건설산업 구조개혁에 대한 항목에는 대부분 찬성했으나 최소운영수입 보장에 대해서만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나 국가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③ 국민의당

-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반대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도입은 바람직하나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규제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타의견을 밝혀 논리상은 새누리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가상한제 재도입에 대해서도 인위적인 규제보다 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기타의견이지만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뉴스테이도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선택하지 않았다.

- 건설 부분에서는 공정임금제 도입만 찬성하고,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 ④ 정의당

- 땅값·집값 거품을 제거하고 주택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제도 도입 및 정책에 모두 찬성했다. 시장 논리보다 재벌 기득권·부동산 투기꾼의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소득세 강화,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금지, 후분양제 도입,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등에 모두 찬성했고, 뉴스테이와 최소운영수입 보장, 저출산 대책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지금처럼 공공주택 재고율이 5%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무주택가구 한부모 가정, 철거민 세입자 등 스스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7. 소비자 등 기타 분야

### 1) 총괄평가

< 소비자 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

소비자 등 (총 11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새누리당		4(36%)	4(36%)	4(36%)
더불어민주당	4(36%)		11(100%)	11(100%)
국민의당	4(36%)	11(100%)		11(100%)
정의당	4(36%)	11(100%)	11(100%)	

- 시민, 소비자 권익증진 분야는 여야의 입장이 명확히 구분된다. 여당과 야당의 정책적 친화도는 36%에 불과했다. 야당 간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큰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① 여당(새누리당) VS 야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인 세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과 비교해 시민,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 야당인 세 정당 모두 공공요금 원가, 통신요금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공공요금의 원가의 공개는 찬성한다고 답변하였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관의 영업비밀 보호를 모두 충족하는 수준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소극적 찬성에 불과하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정부의 인허가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판단을 유보했다.
- 야당인 세 정당은 현행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유통구조의 일부 개선을 유도했지만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지 못한 바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게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이 줄어들었고 요금인하의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정을 반대했다.
- 정보인권을 보장 역시 여당인 새누리당만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터넷임시조치”제도 개선에는 무분별한 악성댓글의 사유를 들어 반대했고, 빅데이터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완화에 대해서도 야당과는 달리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혼란을 이야기하며 소극적인 허용 입장을,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하고 목적별 번호 부여에 대해서는 행정적 혼란을 사유로 반대했다.

## 2) 정당별 평가

### ① 새누리당

- 시민,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장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랫동안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대부분 원론적인 사유를 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서 행정적 혼란 사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또한 신 산업을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은 시민들의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 ②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시민, 소비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약속하고 있다.

### ③ 국민의당

- 타 야당과 같이 대부분 사안에 대해 시민,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지만, 그 판단과 결정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